

2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메카니즘

- (금감위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방향) 은행권은 가급적 인수·합병 방식을 취하고, 제2금융권은 대대적인 폐쇄를 통한 조기 정상화 추구
- (향후 전망) 일부 부실은행의 폐쇄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은행권은 구제형 흡수 합병, 보완형 합병이 주류를 이룰 것임. 제2금융권은 폐쇄 이외에 외국인 인수나 자본 참여도 활발할 전망이다
- (보완 과제) 부실정리기관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지원하고,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·유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.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 증진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제고, 기업금융 자문서비스 제공도 필요

□ 금융기관 폐쇄 방침 발표

- 금감위는 이르면 연내에 증권사 5개, 상호신용금고 15~20개, 신용협동조합 50~60개가 폐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
- 그리고,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예금 대지급에 사용키로 한 9조 원 가운데 금융기관의 신규 폐쇄에 따른 비용을 2조 3,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(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1조 9,000억 원, 증권사에 4,000억 원을 각각 투입. 한편 폐쇄된 14개 종금사에 이미 6조 7,000억 원 지출)
- 보험사의 경우 정리 선정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을 (-)로 정함에 따라 17개 생보사, 2개 손보사, 2개 보증보험 등 21개 보험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
- 신탁운용 규모가 큰 대형 투신사의 경우 가급적 폐쇄 등 극단적 처방을 지양하여, 급격한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임

<제2금융권의 폐쇄 대상 규모>

	현 업체수(社, 98.3말)	예상 정리 업체수	폐쇄에 따른 비용(억 원)
증권사	34	5	4,000
상호신용금고	230	15-20	19,000
신용협동조합	1,664	50-60	

주: 증권사중 고려, 동서 제외

- (은행권) 일부 시중은행의 자산·부채 인수(P&A), 부실 지방은행의 강제 인수·합병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임
- 은행의 경우는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폐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발표됨

- 향후 12개 은행에 대한 국제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에 따라 은행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□ 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유형 전망

- (은행권) 향후 정부 주도하에 부실 은행의 구체형 흡수 합병이 우선 진행될 것이며, 부실처리금융기관(bad bank)의 설립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
-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7월부터 P&A, M&A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며, 일부 은행이 폐쇄될 경우 架橋은행(bridge bank)의 한시적 설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
- 과도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BIS 비율을 맞추어 여력도 크게 없어, 조속한 시일내에 bad bank의 설립과 7월 개시 예정인 자산담보부채권(ABS)의 발행·유통 등을 통한 부실채권 해소 방안도 절실함
- 미국·일본의 사례를 보면 구체 금융은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의 가능성, 가교은행의 한시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청산이나 제3자 매각 방식을 주로 활용함
- 미국은 1980년대 주택 관련 대출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지역 금융 기관인 저축대부 조합(S&L)이 부실화되자 주로 3자 인수를 활용하였고, 일본은 90년대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는 금융기관간 상호 지원으로 대처하다가 최근에는 인수·합병, 사업 양도, 청산기관의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청산 등을 추진하였음

<해외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유형>

처리 방식	내용	문제점
청산 방식 (liquidation or deposit payoff)	-폐쇄 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리인이 되어 파산 절차 진행	-예금자와 채권자의 손실이 커지고,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
구제금융 지원 방식 (bail-out or financial assistance)	-특정 금융기관의 파산 부작용이 클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대출·자금예치·자산매입·출자 등으로 도산 예방	-부실 금융 기관의 경영자나 출자자 등의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증대
架橋은행 방식 (bridge bank)	-감독 당국이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인수 은행이 나설 때까지 한시 운영	-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교은행의 운영 관리 비용 증가
자산·부채 인수 방식 (purchase & assumption)	-포괄적인 자산 인수로 감독 당국의 정리 비용 축소 -예금자·채권자 보호 가능	

- (비은행권) 은행권에 비해 폐쇄 가능성이 높아 주로 청산기관의 설립을 통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며, 증권·보험의 경우에는 인수·합병, 외국인 출자나

인수 등도 활발해질 수 있음

- 65~80개의 신규, 신협이 정리될 경우 주고객인 중소기업, 개인 사업자와 개인들이 연쇄 파산하는 등 극심한 금융경색 사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
- 異業種間 합병으로 업무영역이 상이해 보완이 가능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는 보완형 합병이 유력함
- 은행 자회사인 리스,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은 모은행과의 통합, 개별 독립, 또는 모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임

□ 보완 과제

- (퇴출 정책 방향) **장차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과정에서 크게 ▷금융시스템의 복원 극대화, ▷재정 부담 최소화 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임**
 - 부실은행 정리의 가속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신용경색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은행경영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
 - 또한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우량은행을 육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재정 지원과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관 공동의 가교은행 설립을 통해 부실 정리 작업과 자금중개 기능을 병행시킬 필요가 있음
 - 동시에 상업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bad bank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
 - 또한 은행권도 對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자산유동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
- (기업 금융의 활성화) **현재 추진중인 은행에 의한 기업의 경영 감시 정책과 아울러 기업 금융에 대한 중개기능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**
 - 대기업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은행의 기업경영 감시역할만 강조한 것이므로, 기업의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중개기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
 -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제도에 따른 연쇄도산, 신용등급의 열위에 따른 대출 기피에 직면해 있으므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중심으로 경영 협력 강화 필요
 - 제2금융권의 대규모 폐쇄에 따라 가교회사나 우량사에 의한 업무 대행 대책이 필요하며, 각종 자산 매매나 경영 자문, 기업 경영권에 대한 처리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자문 서비스도 제고될 필요가 있음

(임진국 jklim@hri.co.kr ☎724-4018)